

# 광주시, 폐지 수집 고령자 '폭염 안전 일자리' 지원

### 내달 '자원재생활동단' 운영 재활동품 선별·분리배출 홍보 주 2회·일 2시간 거주지역 배치 "기후위기 취약계층 안전 대책"

광주시가 폭염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극심한 무더위가 예상되는 8월 한달간 '자원재생활동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원재생활동단은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폭염 기간에는

폐지 수집 대신 재활용품 선별 작업이나 분리배출 홍보 등 무더위 영향을 덜 받는 대체 일자리를 제공한다. 자원재생활동단으로 선정되면 8월 한달 동안 주 2회, 하루 2시간씩 거주지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자원순환가게 등에서 재활용품 선별 또는 분리배출 홍보 등 자원순환 일자리에 배치된다. 활동비는 일한 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며, 최대 2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예산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과 생계급여수급자

는 참여할 수 없다. 자원재생활동단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치구의 거주지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원신청서·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치구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채용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5월 폐지 수집 어르신에게 보다 근본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폐지 수집 어르신이 재활용품 사전 선

별 등 안전한 일자리에 참여할 경우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 지역에는 조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폐지 수집 어르신이 607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또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게 휴대용 선풍기, 양산 등 9가지 물품과 폭염 행동요령 소책자가 담겨있는 '폭염 안전물품 꾸러미'를 지급했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의 기부로 폐지 수집 어르신의 안전 보호를

위한 경량손수레 160여대를 지원한다. 현재 수요조사 중으로 조사가 끝나면 대로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정현운 기후환경국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인 폐지 수집 어르신의 안전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올해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무더위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자원재생활동단에 적극 신청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병하기자 byeongha.no@jnilbo.com

## 전남도, 하반기부터 '인구영향평가제' 도입

### 인구 관점서 정책·사업 등 분석 "지방소멸 위기·인구감소 극복"

전남도가 올 하반기부터 각종 정책, 사업 등에 인구구조와 도민의 일상적 삶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를 시범 도입해 인구감소 문제 대응에 나선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은 지방 소멸위기와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사업 목적과 내용을 인구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정부보다 먼저 인구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을 체감, 성공적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5월 까지 전문가 의견수렴 및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연구용역'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쳤다. 대상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중 개별 사업 특성을 감안해 선정할 예정으로, 특히 출산율 제고와 전입인구 확대, 생활인

구 유입, 청년비율 제고 등 인구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중심으로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사업 담당자가 일자리와 출산, 양육, 거주환경 등 인구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체크리스트해 자체 진단한다. 이를 기반으로 2차 심층평가(정성평가)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개선사항이나 제안사항 등을 제언, 평가 결과를 사업 담당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용 여부를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제도가 정착되면 △사업 담당 공무원의 인구 중요성 인식 강화 △인구 정책 강화 및 인구 사업 확대 유도 △인구 성과 관점에서 점진적 사업 개선 등 효과가 기대된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미만국장은 "올해를 지방소멸 극복 원년으로 삼고 인구총력 대응을 위해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함께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다방면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2025년 국고예산 전략회의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1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및 실·국장, 시·군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국고예산 기재부 심의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도 국고예산 심의 동향 공유 및 대응전략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전남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47억 지원

### 대출이자 연2회 최대 1% 지원 농업인·법인 연 100만·200만원

전남도는 고물가, 고금리, 생산비 급등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47억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자차액 지원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융합자금·농어촌구조개선자금·산림사업융합자금 등 정부 농업정책자금 대출로 발생한 이자를 최대 1%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지원한

다. 농업인은 대출금 1억 원 한도에서 연간 100만 원, 농업법인은 대출금 2억 원 한도에서 연간 200만 원까지로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농업정책자금을 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대출이율, 기산일 등을 검증한 후 농업정책자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2월에 이자차액을 금융기관으로 보전해준다. 이에 따라 해당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짚은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 수확량 감소로 농사짓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민선 8기 하반기 시작과 함께 농업인 민생안정 대책으로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지원 △농업정책자금 상환 기간 한시적 유예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농축산물 할인 및 소비촉진 등을 추진한다. 오지현 기자

@jnilbo 전남일보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전남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

드론타임 DRONE TIME 고퀄리티(4K)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 편집 드론타임 010-5681-8084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의 제출공고) 2024년 07월 16일 "갑" 상일전력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하백로 13, 4층 (매곡동) 대표이사 김춘화

콘서트, 뮤지컬, 연극 티켓에매 티켓마루 1588-0766

고창군 공고 제2024-1299호 「구시포항 준설도 투기장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돈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을 부르는 직장인 스피치 아버지 스피치 어머니 스피치 교실 학생부 스피치 교육